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 받지 않게! 원청교섭 쟁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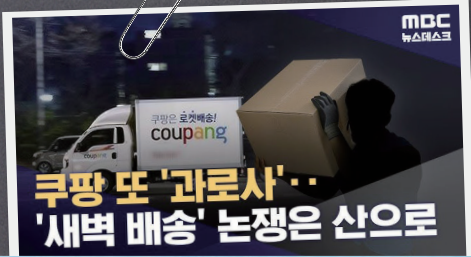
막을 수 있었던 참사



대전 안전공업 중대재해참사 14명 사망, 60명 부상
15년간 7번 화재가 있었지만 노동자의 개선 요구는 무시.
비용절감과 이윤 추구 앞에 소중한 생명이 스러졌습니다.



사람 죽이는 야간노동, 밤에는 잠 좀 자자!



한해 406명이 밤에 일하다 죽는 나라, 대한민국.
쿠팡 새벽배송도 모자라 대형마트까지 확대하려 합니다

더 많이 다치고 더 많이 죽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최근 3년간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의
63%가 하청노동자

2025.6.2.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숨진 하청 비정규직 고 김충현 노동자



2025.11.6. 울산 동서발전, 노후 보일러타워
철거 현장 붕괴로 7명 사망

안전, 진짜 사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도 원청이 안전을 책임지게 합니다.
노조법이 바뀌었으니 하청노동자가 원청과의 교섭을 통해
안전도 지키고 차별도 없어야 합니다.

노동자가 참여해야 산재가 줄어듭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위험성평가에 노조 참여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작업중지권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안전활동시간도 보장하고 하청노동자도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계속되는 맨홀 질식사
지자체 책임은 어디까지?

대불산단 올해만

8명 사망
4건 추락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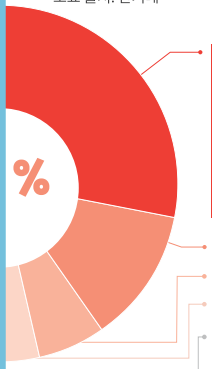
추락사 발생 현황
1월 17일 40대, 13m 추락
1월 18일 4.5m 추락
4월 16일 50대, 20m 추락
8월 07일 60대, 10m 추락

140%
전년 산재사망 증가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 보장하는 지방정부를 원한다!

【공공부문 업무상 사망 재해 현황】

※ 2022년 1월~2025년 8월, 사망자 총 285명
자료: 이윤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1947개 기관 설문 결과
도표 출처: 한겨레



지자체 56.5%

- 기초자치단체 36.8 (105명)
- 광역자치단체 10.9 (31명)
- 지방공기업 8.4 (24명)
- 지방출자출연기관 0.4 (1명)

- 공공기관 24.2 (69명)
- 시도 교육청 12.3 (35명)
- 중앙행정기관 6.7 (19명)
- 법원 0.4 (1명)

지자체도 원청! 노조와 성실히 교섭하고 하청노동자 안전 책임져야 합니다!

공공부문 산재사망 56.5%가 지자체!
청소, 시설관리, 각종 보수 공사 등에서
지자체는 공동사용자입니다.

조례 인력, 예산편성과 심의에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해야 지역이 안전해집니다.

지자체 노동안전 관련 조례만 1천여 개, 하지만 인력도 예산도 없는 빈껍데기

산업단지 관리의무 있는 지자체가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중대재해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 1300여 개 산업단지가 안전관리 사각지대.
산업단지에도 노동자에게 위험을 알리고 개선하는 안전관리체계, 안전대책이 필요합니다.

특수고용 플랫폼, 사각지대 노동자도 안전하게!

배달 등 이동 노동자에게 심터와 건강검진, 폭염한파 대비 물품 지원! 지자체의 책무입니다.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재해,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에는 영업정지와 입찰제한을,
사고조사에는 노동자·시민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산재노동자 온라인추모관



기억하라! 투쟁하라! 4.28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4.28은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를 넘어 산 자를 위해 투쟁하는 결의를 다지는 날!
1993년 태국의 인형공장에서 일어난 화재로 사망한 노동자 188명의 노동자를
추모하며 여러 나라가 4월 28일을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작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